

## 【 보도자료 】

수 신 | 사회부 및 NGO 담당

---

발 신 | 민족문제연구소

담당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팀장 김영환 (010-8402-1718 / [yhkact@gmail.com](mailto:yhkact@gmail.com))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김진영(010-9811-1092 / [286page@naver.com](mailto:286page@naver.com))

---

제 목 |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역사왜곡에 항의하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을 요구한다.**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6월, 일본 도쿄에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당시부터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3.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또한 2015년 당시 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해당시설의 역사의 전모를 기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공개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본정부가 당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오히려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 이에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실태와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을 명확히 전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총 64개 단체-한국 15단체, 일본 49단체)

<첨부>

① 공동성명문

②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pdf)

---

<공동성명>

##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 실태와 증언들의 전시를 요구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수상관저 주도로 추진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산업 근대화만을 찬미하여, 과거의 침략전쟁과 강제노동 역사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평화를 향하여 세계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이코모스도 "역사의 전모를 기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1940년대에)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징용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전략에 포함시킨다."고 약속했다.

국제회의에서 의사에 반하는 동원과 노동의 존재를 언급하며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한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그 희생자를 기억하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직후 일본 정부는 이 문구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노동을 부인했다. 또한 정부의 유네스코 '보전상황보고서'(2017년)에서는 '일본의 산업을 뒷받침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표현에서 크게 후퇴한 인식이다.

또 일본 정부와 함께 등재를 추진한 산업유산국민회의는 하시마(군함도)를 주제로 '군함도는 지옥도가 아니다'라는 선전을 시작하여, 하시마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선전을 맡은 사람은 산업유산국민회의 전무이사로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온 가토 고코(加藤康子) 씨이며 가토 씨는 내각관방참여로도 활동했다.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탁했지만, 그 보고서에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어 강제노동 피해자의 증언이 수집되지 않았다.

2020년 6월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해 온 활동의 결과이며, 센터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가토 고코 씨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센터에서 전시한 하시마 탄광의 내용 가운데 전 도민들의 증언은 하시마는 서로 친한 공동체였으며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증언의 오류는 지적 하지만 강제노동 피해의 증언 자체의 전시는 없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를 통해 전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계 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유네스코 정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또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역사의 청산 없이 동아시아의 우호와 평화는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노동의 피해 실태와 증언을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관계자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한다.”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2018년)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피해자단체, 전문가 등과 대화하여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동아시아 공동의 기억센터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14일

---

## 한국(15개 단체)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기억과평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평화디딤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 일본(49개 단체)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강제동원문제해결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과거와현재를생각하는네트워크훗카이도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변호단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  
나라현조선인강제연행에관한자료를발굴하는모임  
나카노협동프로젝트  
노!합사(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지원회)  
동아시아광산사를기록하는모임  
동아시아화해와평화네트워크  
마츠모토강제노동조사단  
베를린여성회  
불허!헌법개악·시민연락회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잇는모임  
아베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의모임 · 도쿄  
액티뷰·뮤지엄'여성들의전쟁과평화자료관'(wam)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  
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요구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유스포럼후쿠오카  
일본그리스도교회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단가나가와교구사회야스쿠니·천황제문제소위원회  
일본기독교단니시주고쿠교구야스쿠니천황제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동아시아의화해와평화위원회  
일본성공회도쿄교구인권위원회  
일본의전후책임을청산하기위한행동훗카이도모임  
일본제철전징용공재판을지원하는모임  
일조협회  
재외피폭자지원연락회(나가사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재한군인군속재판의요구실현을지원하는모임  
조선여성과연대하는일본부인연락회  
쇼세이탄광의물비상을역사에새기는모임  
중국인'위안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  
즉위·대상제위헌소송의모임  
페민부인민주클럽  
평화를생각하고행동하는모임  
평화의촛불을!야스쿠니의어둠에촛불행동실행위원회  
평화의힘포럼  
평화자료관·쿠사노이에  
평화활동지원센터(나가사키)  
피스보트  
필리핀인'종군위안부'를지원하는모임  
한국의원폭피해자를구원하는시민모임나가사키지부  
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3.1조선독립운동일본네트워크(구100주년캠페인)  
ActNow!가나가와  
ATTAC·Japan(수도권)